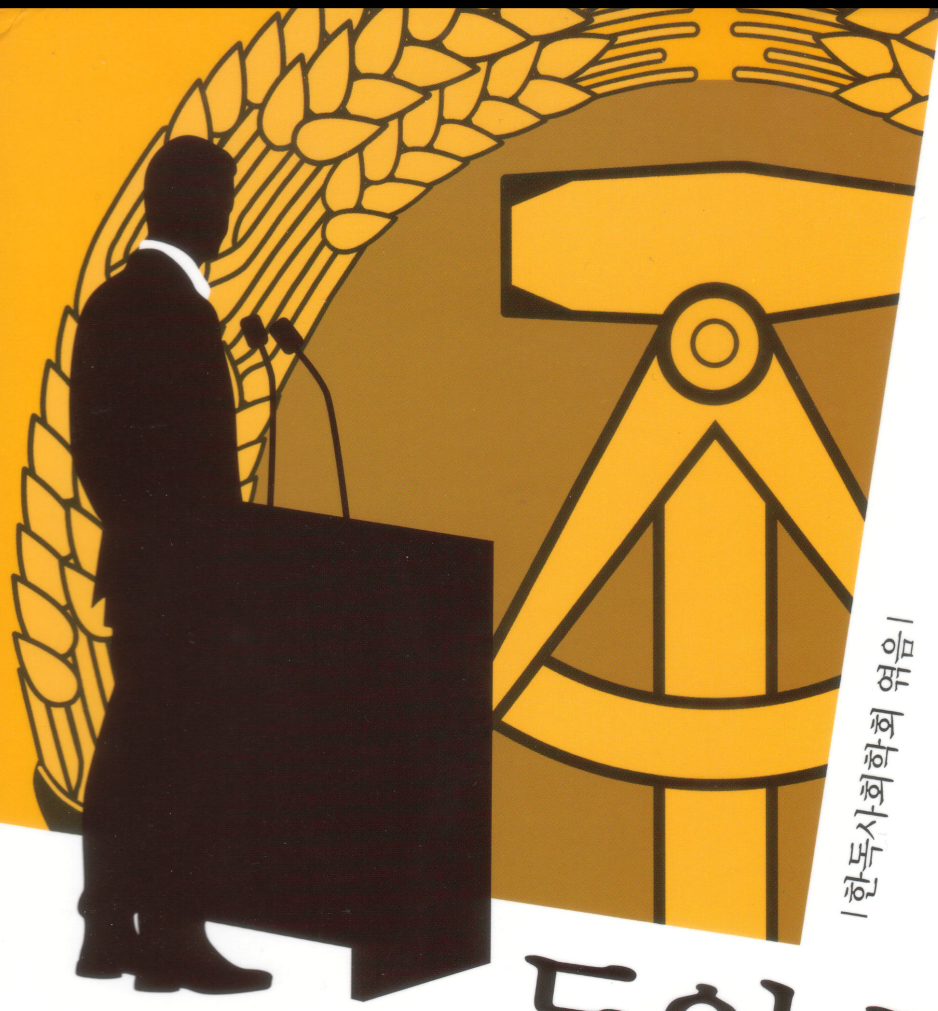
독일 통일과 동독 권력 엘리트
남북통일에의 함의
| 한독사회학회 엮음 |
German Unification and Power Elites in the East Germany
Lessons for the Korean Unification
한울 아카데미
독일 통일과 동독 권력 엘리트
남북통일에의 함의
| 한독사회학회 엮음 |
한울 아카데미
1312

1) 분단의 비용과 통일의 비용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한국의 북한 흡수는 경제적 우려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북한 및 남한의 경제수준 차는 이전 동독과 서독의 차이보다 크며,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만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남한 국민의 생활수준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Jeon, 2009).

이러한 우려에 대한 반대 입장은 어떠한가? 학술대회 중 김영희 대사가 강조했듯이 분단의 비용도 항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높은 국방비와 더불어 상당한 정도의 인도적 지원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은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시키지도 않으며 북한의 정치적 구조도 바꾸지 못한다.

UN의 추정으로는 2,300만 명의 북한 주민 중 600만 명이 기아에 허덕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식량원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인도적 도움이 '전체주의적 국정운영'에 따라 분배된다면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Schloms, 2000).

미국 외무성은 북한이 국내총생산의 4분의 1가량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했다.[41]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에 대해 남한 역시 상당한 정도의 전투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은 통일 이후 양쪽의 민간 경제부문에서 사용될 수 있다.

---

41) AP in Focus online vom 6. Oktober 2008, "Nordkorea: Ein Viertel des BIP für Militärausgaben", http://www.focus.de/panorama/welt/nordkorea-ein-viertel-des-bip-fuermilitaerausgaben_aid_338429.html

골드만삭스의 권구훈에 의해 발표된 24장 분량의 논문에는(Kwon, 2009) 짐 오닐(Jim O'Neil)이 참여했는데(Ramstad, 2009), 그는 이전에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을 성장하는 경제 대국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러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숙달된 노동력, 우라늄·석탄·철광석 같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유리한 인구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잠재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독재체제의 종결과 남한과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의 첫 단계에서 북한은 2013년부터 2027년까지 7%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 21세기 중반에 다다르면 통일된 한국은 프랑스, 독일 및 일본보다 더 높은 국민총생산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을 상기해야 한다. 북한 주민이 독재체제에서 벗어나면 그들에게 통일이라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동독에서 그랬듯이 공포심에 의한 탈출행렬이 이어질 것이다. 남한은 북한의 공산주의 엘리트가 다시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북한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만이 남한으로의 대규모 탈출행렬을 막을 수 있다.

모든 독재체제 내에서(몇몇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혹독한 부정적 선택(Negativ-Auslese)이 행해진다. 의지가 약하고 특징이 없으며 부족한 사람들이 선호되고, 용기 있고 지적이며 창의적인 사람들은 배제된다. 모든 고귀한 것이 무너진다. 통일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이는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독재가 길어질수록 재건을 위한 비용 역시 상승한다. 장래의 통일 한국 자본주의의 유일한 문제는 통일 과정에서의 실업률 증가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처하려면 정치적 노련함이 요구된다.[42]

---

42) 통일 이후 독일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Albrecht Müller, "Der abgebrochene

2) 북한에는 조직화된 저항세력이 존재하는가?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그랬지만 아직 북한의 조직화된 혁명적 저항세력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했다.[43]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1980년대 후반 서독에서 동독을 평가할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동독에서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합법적인 운동이 불가능했고, 저항이 있더라도 약간의 비판과 대안제시 정도일 뿐이지 체제전복이나 혁명운동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 인식되었다. 국가권력이 저항 집단을 무조건 억압하고 구속한다면 저항 집단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2009년 중반에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자문하는 브루킹스 연구소는 북한 붕괴에 대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달했다. 붕괴를 믿는다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경제적 불황이 혁명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동독에서보다 북한이나 쿠바에서 먼저 혁명이 발생했을 것이다. 필자는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저항운동가를 믿고 싶다. 여러분에게 그리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저항운동단체가

Vereinigungsboom", *Vorwärts*(März, 2004), S. 11 참조.

43) 2009년 9월, 독일 개신교 연합회 회장인 볼프강 후버 주교(Bischop Wolfgang Huber)가 개신교 사절단과 함께 남과 북을 동시에 방문했다. 1989년 이후 20년 만에 남·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북한의 교회와 접촉하는 것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지만 국가 소속의 교회와만 접촉할 수 있었다. 필자는 서울에서 전 튀링겐의 주교인 크리스토프 켈러(Bischop Christoph Kaehler)를 만났는데, 그는 필자에게 북한의 한 저항운동가에 대해 남한의 여러 교회와 단체에 물어 보았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저항운동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알려지기 전에 즉시 체포되어 강제수용소로 압송되거나 사형을 당했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보안요원들에게는 훨씬 위험하게 보일 것이다. 그들은 권력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그렇게 많은 강제수용소[44]가 있다는 것은 북한 그 어디엔가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용감하고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이다. 독재자에 대해 저항했기 때문에 강제노역을 하고 있지 않은가?

3) 한국의 통일을 위한 몇 가지 제안들

일방적으로 제공되었던 햇볕 정책은 북한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답을 얻지 못했다. 2008년 2월부터 한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대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원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가난한 북한에 지원하는 원조와 핵무기 감축을 연계시키려 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에 대해 북한은 매우 불쾌해했다. 그러나 2008년 8월 전임 대통령의 장례식 때 사절단을 보내 대통령과 중단된 대화의 복원을 시도했다.

1989년 이전 서독의 정당들은 동독의 조직화된 체제저항 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웠다.[45] 한동안 군사적인 긴장 완화 정책과 동유럽의 독재자들에 대한 저항운동 지원은 모순된 태도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서방 지도자들과의 대화와 대중 지지가 매우 취약했던 공산당에 대한 재정 지원을 동시에 거리낌 없이 시도했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말살이 그들의 궁극적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

44) 현재 북한에는 약 30개의 강제 수용소가 있고, 100만여 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인구는 총 2,300만 명 정도이다.

45) 그러나 SPD, 녹색당, CDU에 속한 정치인들이 동독의 저항 운동을 지원했었다. 다만 이 지원은 정당 차원이 아닌 개인이나 집단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모순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현명한 정치인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고하여 한반도의 공산주의 극복에 대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국 국민의 탈출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고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억제할 수 있다면 공산당의 권력 엘리트들은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의 주장이 정확하다면, 권력 엘리트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다음의 두 방향에서 모든 정치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인들의 탈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둘째, 조직적 저항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그런 의미에서 14개의 지원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토론 주제로 제시하려고 한다.

① 북한의 체제저항 세력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원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라. 정치적 난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탈출 기회를 제공하라.
②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여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달하라.
③ 정보에 대한 자유는 표현 자유의 전제조건이다. 북한 여행이 가능하다면 그곳을 방문하라. 그리고 억지로 북한에서 구할 수 없는 책들을 가져가진 말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책을 갖고 가서 그곳에 놓고 오라. 필자는 북한의 자유를 위한 활동을 벌이는 '전사의 본부'가 전단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전달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이 기구의 회원들은 거대한 풍선을 통해 전단을 북한에 뿌리고 있다. 풍선을 일정한 고도에서 터지게 하여 그 지역의 주민에게 북한에서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 풍선들은 주로 남북의 접경 지대에서 띄우고 있다.
④ 라디오는 효과적이고 저렴한 정보전달 수단이다. 자유 북한 라디오

방송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방송을 하고 있다. 청취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밀반입되는 라디오가 매우 많다고 한다.

⑤ 한국 정부에 북한의 정치범들을 사오라고 요구하라. 그렇게 되면 북한의 반체제 세력들도 그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남한 정부에 의해 석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구속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 반체제운동의 참여를 그리 큰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⑥ 북한의 정치범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을 남한에 건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독이 잘츠기터(Salzgitter)에 동독의 정치범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⑦ 통일과정에서 보편적인 인권에 서명한 UN 회원국으로서 남한은 국가로서 북한과 북한의 형법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⑧ 통일 이후 모든 권리가 모든 지역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집단적 불공정 행위는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된 국가에서 공산당 권력 엘리트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⑨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국가안전부에만 국한된 것만이 아니고 경찰과 군대, 당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 수집되어 있는 개인정보들이 공개되어야만 한다.

⑩ 공직에서 정치적인 오류가 있는 북한 사람들을 축출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지금부터 북한의 관료제를 담당할 수 있는 관료들을 훈련시켜서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통일 시기에 교사들을 북한에 보내 미래를 건설하라.

⑪ 통일 이후 북한의 국가정당인 노동당의 해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당의 재산이라도 몰수해야 한다.

⑫ 북한의 연금생활자들에게 직업·근무연한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권력 엘리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더욱 오래 누리게 될 것이다.

⑬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받은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⑭ 한국의 정치인 중 북한에 대해 유화적이거나 호의적인 정치인들을 선택하지 마라. 강한 정치력만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길이다.

4) 한순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보기

1989년 여름, 체코 프라하의 서독 대사관이 동독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을 때, 전 세계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동독 언론에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그래서 동독 국민은 몇 달 뒤 공산당 서기인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가 외국 대사관으로 피신하는 마지막 정치망명자가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91년에 이미 소련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호네커가 소비에트 동료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모스크바의 칠레 대사관으로 피신했을 때 북한이 그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망명처 제공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동독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머가 나돌았다. 북한은 그들의 제안을 곧 철회했는데, 이유는 호네커가 나타나는 곳에는 장벽이 무너지고 경계선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에 호네커는 칠레를 망명지로 선택했다.

이제 진지하게 몇 마디 덧붙이고 싶다. 동독과 북한은 공산주의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공동의 현실적 교훈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거대한

정치적인 실험이 독일과 한국에서 행해졌고, 이로 인해 이 두 국가는 강력하게 대치되는 민족의 분단을 경험했다. 분단된 두 세력은 각각 민족주의, 인종주의, 혹은 문화주의와 같은 이념을 통해 상호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념으로 형성된 집단적 정체성은 우리가 왜 분단되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다. 양국 분단의 역사는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해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구조가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필자는 한국의 정당과 정치인들이 당시 서독의 정당과 정치인들보다 더욱 현명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하여 이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멀리 내다보는 동시에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실패의 교훈을 배우기 바란다. 북한의 반체제 저항운동 단체나 통일운동 집단을 도와주기 바란다. 모든 한국인을 위해 남과 북이 독일보다 더 성공적으로 국가 통일을 이루기를 기원한다.